

언어 장벽·정보 부족에...광주·전남 외국인 “정착 힘드네요”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 안엘레나(여·46)씨는 지난 겨울 이사를 준비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건물주에게 퇴거 의사를 밝혔지만, “겨울이라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어렵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당장 나가려면 월세 40여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고, 새로운 거주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는데 부동산 수수료와 청소비 30만원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안씨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복잡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더 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조상들의 나라인 한국으로 왔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기릴 곳이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고를라라(여·39)씨도 2년 전 이사를 준비하며 ‘눈 뜨고 코 베이듯’ 수백만원의 돈을 잃는 경험을 했다.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 측에 퇴거 의사를 밝혔더니, 집주인이 “통보 시점이 늦었으니 보증금에서 200여만원을 공제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당초 집주인은 “집 나가기 한달 전에만 말해 달라”고 구두 안내를 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서 한쪽에 ‘3개월 전 통보’ 조항을 적어 놓았던 것이다. 고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해봤지만, 대응 방법을 찾기 어려워 결국 3달치 월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외국인들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계약 단계부터 퇴거 과정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주거 갈등 잇따라 불편·피해 호소 시민단체 분쟁 예방책 마련 나서 러시아어 임대차 체크리스트 배포 지자체 연계 지원 체계화 필요



러시아어 '주택임대차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 고를라라씨.

광주·전남 지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이 주거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등으로 손쓸 수 없이 거금을 잃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YMCA에 따르면 지난해 월곡동 고려인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료 법률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거 관련 어려움이 크다는 불편 사항이 다수 접수됐다.

특히 계약서 등 핵심 서류를 갖추지 못했거나 언어 장벽으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주거 분쟁을 겪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 광주 YMCA 설명이다.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수리비·원상복구 등을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려 들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광주복지연구원원이 발표한 ‘광주시 외국인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들은 주거를 선택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주거 관련 정보 부족(28.8%)’을 꼽았다. 이어 계약 내용을 한국어로만 설명하는 점(22.1%)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주거 정보를 얻는 경로는 친구 등 주변 지인을

통한 경우가 47.0%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18.3%)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동산 중개업자(17.8%)나 외국인지원기관(10.4%) 등 공식적인 창구를 활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완숙 광주외국인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일부 건물주는 수 십만원의 청소비를 선입금으로 요구하거나 퇴거 후 공제하려 해 ‘눈 뜨고 코 베이식’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물주가 계약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임의로 떼어가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의 경우 외국인 증가율 전국 1위에 해당하는 등 지역 내 이주민은 늘고 있는 터라 이들의 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주민은 광주 4만7728명, 전남 9만

5832명보다 전년보다 각각 1.9%, 10.5% 증가했다. 전남의 증가율은 전국 평균(5.0%)의 2배를 넘어섰으며,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중은 광주 3.3%, 전남 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 외국인주민 주거 분쟁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YMCA는 지난 23일부터 한국어와 러시아어 등 2개 국어로 구성된 전자 파일(PDF) 형태의 ‘주택임대차 체크리스트’를 고려인마을 단체와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 시범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는 집을 구할 때부터 퇴거까지 총 5단계로 구성됐으며, 서류 점검 사항과 체류지 변경 신고 안내, 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 YMCA는 수요에 따라 제공 언어를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영어판 체크리스트도 제작 중이다.

다만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외국인 주민이 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지자체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의 경우 이날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정착 검토에 나서는 등 정주 기반 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신조야 광주 고려인마을 대표는 “지역에 정착하려는 고려인과 외국인 주민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등으로 주거 갈등을 겪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특히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증금 관련 분쟁의 경우 이주민들에게는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다.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글·사진=윤종영 기자 yoon@kwangju.co.kr



25일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다리차가 강풍에 넘어지며 놀이터를 덮치고 인근 초등학교에 정전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시 서구 제공)

아파트단지서 이사하다 하마터면... 강풍에 60여m 사다리차 전도 “황”

놀이터 덮쳐...인명피해는 없

는 없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다리차가 강풍에 넘어지며 놀이터를 덮치고 인근 초등학교에 정전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광주시 서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힐스테이트 3단지 내에서 높이 60여m의 사다리차가 전도됐다.

다행히 놀이터 등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

는 없었다. 하지만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단지 내 놀이터 방향으로 쓰러졌고, 고압 인입선을 건드려 인근 주월초의 전기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겼다.

사고 당시 이삿짐센터에서 사다리차를 설치하던 중 강풍이 불면서 차량이 균형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은 복구 작업을 벌여 3시간여 만인 낮 12시 30분께 전력 공급을 정상화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24억 공금 빼돌린 대기업 직원 징역 7년 선고

‘비용 대납’을 핑계로 협력업체를 속여 24억원 대 회사 공금을 빼돌린 대기업 광주사업장 직원이 징역 7년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광주사업장 출신 직원 A(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대기업 광주사업장에서 43차례에 걸쳐 허위 발주를 해 대기업 측에 27억여원의 피해를 입히고, 이 중 세금 명목 비용을 제한 24억 9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광주사업장에서 자체 발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협력업체인 B 회사 측에 ‘재가공 비용 대납’을 요구하며 허위 발주서를 넣고, 발주 대금을 가짜 명의 회사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사 측에 연락해 “자체 재가공 업체 C 회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협력업체가 아니

어서 대금을 못 주고 있다”며 “기업을 대신해 자체 재가공 비용을 C사에 지급해달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C사는 A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냉장고 전자부품 조립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실물 수량 검증 없이 입고 의뢰해도 사측이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자신이 자체 발주·검수 담당자로서 재고 수량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 뒷바라지로 생활비가 부족하게 돼 부득이 범행하게 됐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대출금 변제, 분양권 매수, 상가 계약, 고가의 자동차 리스비 등 생활비와 무관한 용도에 상당 부분 사용했다”며 “피해금 대부분이 소비돼 남아있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미래국제고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 유감”

4개국 학생 45명 입국 무산...도교육청, 법무부에 한시적 유예 등 요청

전남도교육청이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비자가 불허된 것과 관련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내려진 행정 조치로 학생과 학교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25일 전남도교육청은 법무부의 급작스러운 비자 불허 문제로 해당 학생은 물론 교육청이 아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학생들과 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남미래국제고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3월1일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을 위해 강진군에 있는 옛 성요셉상호문학교 부지에 조성했다.

올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4개국에서 4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지난 23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 불허를 최종 통보하면서 전원 입국이 무산됐다.

법무부는 동남아 국가 유학생이 대거 입국할 경우 이태리나 불법체류 등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당초 45명 입학에 4개 학급으로 개교를 준비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이주배경학생 6명과 고려인 후손 4명 등 총 10명의 입학생을 중심으로 2개 학급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미래국제고는 단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학교가 아니라, 전남도 교육청이 10여 년간 축적해 온 국제 직업교육 정책 경험이 집약된 결과물로 2016년부터 고려인 후손과 쿠바 독립운동가 후손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운영하며 재외 교포와 국제 학생 대상 교육 모델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은 우선 법무부에 학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 유예’나 ‘조건부 승인’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2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6]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